독일의 보증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황 인 국 책임연구원 | KODIT 경제연구소

1. 독일 보증제도의 현황
2. 보증은행의 운용체계
3. 보증절차
4. 정책적 시사점

1. 독일 보증제도의 현황

□ 1930년 유한회사 성격의 **보증협회**를 설립한 것이 독일 보증제도의 효시

– 1929년 경제공황의 여파로 실업자 증가, 중산층 붕괴 등 경제적 어려움속에서 지역 **상공회의소와 수공업회의소를 중심으로 고용을 확대하고 회원기업의 갱생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

– 보증협회는 공황 극복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실업문제가 현저한 일부 공업도시에서만 설립된 한계로 1940년까지 라인·마인보증협회를 제외한 모든 보증협회들이 폐쇄됨

□ 오늘날 독일 보증제도의 전신은 1953년에 설립된 **신용보증조합**(KGG ; Kreditgarantie Gemeinschaften GmbH)으로 알려져 있음

– 수공업체 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시발로 상공인연합회 등 타업종단체로 확산되었고, 이후 각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조합으로 발전**

□ 1970년 이후 신용보증조합은 **보증은행(Bürgschaftsbanken)**으로 이름을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1980년대에는 **업종단체별 이익단체의 특성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산업전체를 지원하는 금융기관으로 발전**되었으며, 독일 은행법과 바젤I의 규제를 받게됨

– 1990년에는 전체 보증은행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보증은행협회가 설립되었으며, 독일 통일후에는 동독 지역으로 보증은행 설립이 확대됨

– 현재 전국 **16개주에 22개 보증은행**이 산재하여 각 주의 중소기업에 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음

표 1 | 독일의 주별 보증은행 현황

(단위 : 개, 백만유로)

지 역 (州)	보증은행의 개수	업 체 수	보증잔액	신규공급
바덴-뷔르템베르크[1]	1	11,082	1,287.9	281.3
바이에른	2	2,267	360.5	68.1
베를린	1	1,899	206.5	48.0
브란덴부르크	1	1,803	239.8	61.0
브레멘	1	349	45.9	11.5
함부르크	1	3,007	265.3	75.0
헤 센	1	1,970	226.9	37.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1	1,630	194.7	26.7
니더작센	1	2,059	230.4	44.9
노르트하인-베스트팔렌	2	4,230	417.1	92.7
라인란트-팔츠	2	1,653	229.9	67.1
자를란트	2	156	19.7	5.7
작 센	1	3,079	424.8	77.9
작센-안할트	1	2,403	358.9	66.7
쉴레스비히-홀스타인	1	2,671	337.5	76.9
튀링겐	1	2,289	296.9	53.8
조지알비르트샤프트[2]	1	214	56.3	8.7
합 계(2006년)	22	42,661[3]	5,199.3[4]	1,104.2

자료 : 독일 보증은행협회

1) 바덴뷔르템베르크 주(Land Baden-Württemberg) 보증은행은 독일 보증은행중 최대 규모로 전체 보증잔액중 25%를 차지하고 있음. 同주는 독일 서남부에 있는 주로, 면적 3만 6,000㎢, 인구는 1,047만명. 2차 대전 후에 바덴, 뷔르템베르크, 호엔촐레른 지역을 통합하여 신설된 주. 주도는 슈투트가르트.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의 본사가 주도인 슈투트가르트에 있음.

2) 노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병원, 훈련기관, 휴양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투자 및 건설을 지원하는 사회경제 보증은행 (Guarantee Bank for Social Economy)으로 주별로 설립된 다른 보증은행과 달리 관할구역이 없음

3) 2003년 기준 독일의 총 기업체수(3,020천개) 대비 이용율은 1.41%임

4) 한화 환산시 보증잔액은 7조 2,151억원, GDP(2조 8,840억달러)대비 보증잔액은 0.26%, 업체수로 나눈 평균 보증금액은 122천유로(한화 약170백만원)임

2. 보증은행의 운용체계

1) 보증은행의 지원체계와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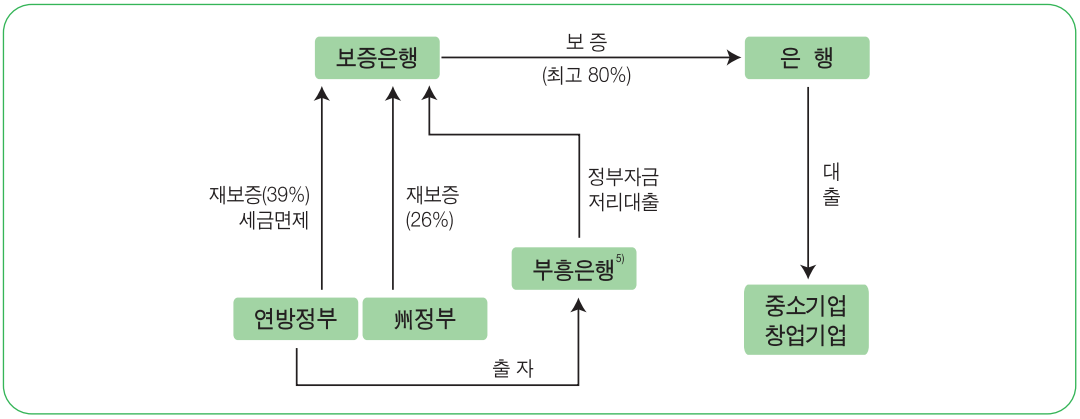
□ 독일의 보증제도는 **재보증(counter guarantee)**과 부흥은행을 통한 정부 특별자금의 **저리대출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지원**

– 보증은행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대출에 대해 최고 80%를 보증하고 연방정부 39%, 주정부가 26%를 각각 재보증(재보증 합계 65%)

○ 재보증을 감안한 **각 주체별 실질적인 보증책임 비율은 보증은행 28%, 연방정부 31.2%, 주정부 20.8%임 (정부의 책임비율 합계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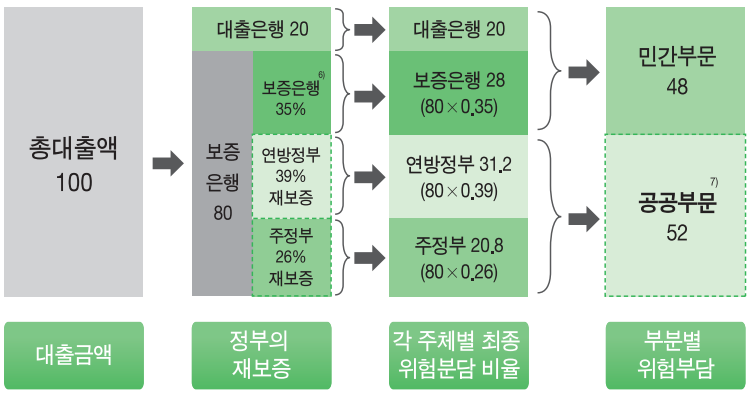
□ 보증부대출 절차는 ① (기업)대출신청 ➡ ② (채권은행)신용조사후 보증신청 ➡ ③ (보증은행)보증심사 및 재보증신청 ④ (연방정부 · 주정부)재보증 승인 ➡ ⑤ (보증은행)보증승인 ➡ ⑥ (은행)대출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짐

그림1 독일보증제도의 구조



5) 부흥은행(KfW ;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은 독일 경제부흥을 목적으로 1948년 "KfW 법률"에 의거 설립된 공공법인으로 중소기업 · 주택 · 환경보호 사업지원, 개도국 원조 및 금융협력, 수출 및 프로젝트 금융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80%,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방정부가 KfW의 모든 채무를 보증.

그림 2 재보증 시스템의 책임분담 비율



□ 보증제도의 운영에 공적부문의 지원방법은 대체로 아래의 4가지 방법에 의해 이루어짐

– 독일의 경우 **재보증, 저리자금 대출, 세금면제**의 방법으로 보증은행을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공적지원의 강화로 유럽에서 상호보증제도가 가장 발달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음

공적지원 방식	지 원 효 과
① 재보증	■ 민간 보증기관에 보증을 제공 – 보증기관의 신용위험을 감소시키고, 보증여력을 증가
② 저리자금 대출	■ 저리의 정책자금을 보증기관에 대출 – 보증기관의 재무적 부담을 경감 – 보증료를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높임
③ 무상출연	■ 무상출연에 의해 보증기관의 기본재산 확충 – 재보증, 저리자금 대출에 비해 비용부담이 큼
④ 세금 혜택	■ 보증기관의 세금을 감면 혹은 면제 – 이익의 재투자를 가능하게 함

6) 법정운용배수는 35배임 (보증은행이 35%의 책임을 분담하는 점을 감안시 보증은행의 실제 운용배수는 바젤II 기준에 따라 35×0.35=12.5배로 운용)

7) 구동독지역에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상 연방정부 48%, 주정부 32%(합계 80%)의 비율로 서독지역 보다 재보증 비율이 높음. 공공부문의 최종 위험분담은 80×80%=64로 서독지역보다 높음.

□ 보증은행은 경제단체 및 은행 등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성격의 자조적(self-help) 기관**으로, **민간(private) 특수은행**으로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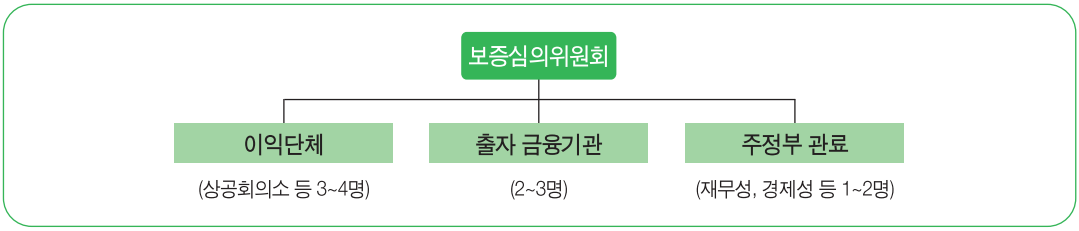
– 연방은행감독원의 허가를 얻어 설립되어 **대출보증, 리스보증, 투자회사의 중소기업 지분투자에 대한 보증 등**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며, 대출이나 예금의 취급은 금지

– 보증은행의 출자자는 수공업협회와 조합, 상공인협회, 자유업 · 조경업자협회, 경제인협회, 은행, 금고, 은행협회 및 보험회사 등임

– 주주총회, 이사회, 감독위원회 및 보증심의위원회 등 4개의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보유함

– **보증심의위원회는 보증결정, 보증운용에 있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구**로 분야별 경제단체 전문가, 주주 금융기관 및 주정부에서 파견된 대표자 등 7~8명의 위원으로 구성

그림3 보증심의위원회의 구성



주) 다수결원칙에 의해 의안을 결정, 주정부 파견위원이 거부권 행사 가능

– 보증은행은 은행법의 규제를 받으므로 일반 은행이 준수해야하는 지급준비율과 최소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의 8%)을 유지해야함

– 보증은행은 독일 정부의 신용평가 등급인 AAA로, 보증부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0%를 적용받음

– 보증대상기업은 독일 소재 중소기업, 자유직업인 및 창업기업으로 사실상 모든 업종이 보증대상임

○ 2005년도 바덴부르템베르크주 보증은행의 업종별 신규 공급액은 **수공업 24.1%, 소매업 23.6%**, 서비스업 19.8%(요식업 제외), 제조업 15.4%, 자유전문직 10.1% 등임

– 주별로 **지역별 관할구역제**(single guarantee bank per bundesland)로 운영되어 경쟁시스템이 없는 독점체제를 유지

○ 한주내에 2개의 보증은행이 있는 경우에도 업종별로 사업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주정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으로 보증은행간 경쟁을 지양함 (pacts of no competition)

○ 바덴부르템베르크주 **보증부대출 취급 금융기관의 비중은 저축은행 39.3%, 협동은행 29.6%**, 상업은행 19.6%, 투자회사 11.5%임

2) 세부 운영체계

□ 보증제도의 운영재원은 납입자본금, 적립금, 보증료 및 등록료 수입 외 유가증권 및 은행예치금의 이자수입 등 자산운용수익 등으로 조성

–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주주에게 배당하지 않고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한 후 대손충당금 설정부족액 또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

□ 보증은행은 국책은행인 부흥은행(KfW)을 통한 유럽부흥프로그램(ERP ; European Recovery Program) 특별자금[8]의 저리융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

8) 1947년 유럽부흥계획-마샬플랜에 따라 전후 경제복구를 위해 설립된 특별자금으로 독일연방 경제성의 감독하에 부흥은행이 관리. 마샬플랜은 처음부터 무상지원이 아니라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하는 여신 제공 형태로 지원되었으며, ERP 특별자금은 이에 따라 원금보전과 수익성 달성을 통해 유지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기금의 형태로 운용됨. 1948년 30억 유로로 시작된 ERP 특별자금은 사업수익 달성을 통한 기금확대로 2003년말 총규모가 124억유로로 성장하였으며 사회인프라, 환경인프라, 중소기업 수출금융, 중소 벤처기업 지분참여 등 다양한 공공 목적으로 사용.

– 규모가 가장 큰 바덴주의 보증은행의 2005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정부자금의 저리대출에 의한 조달이 138백만유로로 총부채의 45%**를 차지

– 저리대출은 **보증잔액에 연동되어 한도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바덴주의 경우 전년도 **보증잔액(1,138백만유로)의 약 12%의 저리대출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금리는 1.8%**임

표 2 | 바덴 부르텐베르크 보증은행의 대차대조표의 구조(2005년)

자 산		부 채		
현 금	xx	차입금	저리대출	138m
			일반대출	xx
투자유가증권 (주식, 회사채, 금융상품)	200m	대손충당금		xx
토지 · 건물	xx	퇴직충당금		xx
기타 고정자산	xx	자기자본		56m
		부외항목 (보증잔액)		보증은행 부담분 (35%)
				재보증 부담분 (65%)

□ 저리에 의해 조달한 장기차입금과 이익잉여금으로 주식, 회사채,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여 **투자이익을 보증운용 재원으로 활용**

– 투자방침은 운영위원회의 엄격한 가이드라인에 의해 결정되어 시장위험을 통제하며, 감독기구는 주기적으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통제함

○ 바덴주의 2005년 **투자유가증권은 2억유로로 총자산의 75%**를 차지

□ 보증은행의 보증잔액은 대차대조표의 **부외항목으로 대변항목에 기록**

– 보증은행 부담분(35%)과 재보증 부담분(65%)으로 나누어 별도 분리

□ 보증은행 손익계산서의 주요항목으로는 보증료수익, 투자수익, 인건비, 관리비, 대손상각비 등임

– 보증료는 0.8%~1.5%이고, 보증금액이 아니라 전체 대출금액에 대해 부과됨

○ 보증료는 신용분석사(credit analyst)가 결정하며 대개의 경우 고정요율 체계로 신용등급, 대출기간, 대출금액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님

○ 최근 일부 보증은행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차등화된 보증료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추진중임

○ 매년 부과되는 보증료 외에 보증승인시에 보증금액의 1%에 해당하는 등록비(processing fee)를 1회에 한해 지불해야함

○ 등록비는 보증을 거절하더라도 반환하지 않으며 보증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등록비의 50%를 반환함

□ 투자에 의한 수익은 이자수익, 배당금수익, 자본수익 등이 있으며 이는 보증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수익원임

– **투자수익으로 운영비용을 조달**하며 보증료 수준을 적정하게 유지하여 기업의 보증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일부 대위변제 비용도 충당함

○ 바덴주 보증은행의 2005년 보증료 등 수수료수익은 16백만유로, **투자수익은 8백만유로로 수수료 수익의 50%**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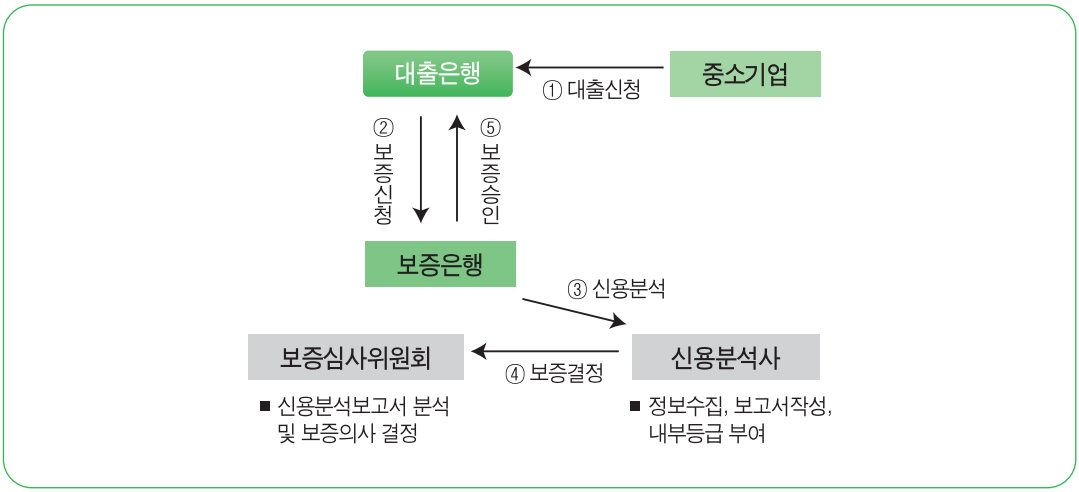
3. 보증절차

1) 보증신청 절차

□ 통상 중소기업이 은행에 먼저 대출을 신청하고, 은행이 기업의 신용을 분석한 후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은행이 보증은행에 보증을 신청

– 중소기업이 대출은행을 경유하여 보증을 신청하게 되는 간접방식의 절차임

그림4 보증승인 절차(간접방식)



□ 몇몇 보증은행의 경우 중소기업이 보증은행을 직접 접촉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대출받을 은행을 접촉하는 직접방식[9]을 도입

– **주거래은행(hausbank)과의 거래관계가 없어 은행에 직접 대출신청하는데 애로가 있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됨

9) 은행을 거치지 않은 보증(surety without a bank)이라는 뜻의 독일어 "Bürgschaft ohne Bank"의 머리글자를 따서 BoB방식이라고 함

○ 보증서는 통상 3개월의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중소기업이 보증서(담보)를 가지고 대출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조건 등을 협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입장에서 자금조달이 유리**

○ 직접방법에 의한 보증신청의 경우 보증한도가 주별로 다양하지만 대개 **8만유로~25만유로 사이로 업력이 짧고 은행과의 거래관계가 길지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소액자금 위주**로 운용

○ 2007.7월 기준 22개 보증은행중 12개(55%)가 직접방법을 도입하였으며, 브란덴부르크주 보증은행의 경우 2006년도 총 보증신청 597건중 291건(48.7%)이 직접방법에 의한 것임 (거절율 53%)

○ 직접방법의 도입으로 기존의 간접방법에 의해 보증신청이 가능한 기업들도 보증은행에 직접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은행의 심사부담 · 비용상승, 보증신청 거절율의 증가로 인한 단점** 등이 발생

표 3 | 직접방법(BoB)의 장 · 단점

장 점	단 점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유리	■ 보증은행의 기업심사 비용 증가 및 등록비 인상
■ 은행의 거래비용 경감 – 대출은행의 신용조사 등 비용절감	■ 주거래은행을 통한 기업의 사전심사가 불가능
■ 보증은행이 경영지도 등 부가 서비스 제공	■ 보증은행의 보증거절율 증가에 따른 평판 훼손

□ 최고 **보증한도는 1백만유로, 대출금액의 8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증은행은 중소기업, 특히 창업기업 보증을 주로 취급

– 바덴주 보증은행의 경우 60%가 창업기업, 40%가 그 이외의 중소기업에 보증을 공급

○ 운전자금, 고정자산 투자, 기계설비 도입, 무형자산, 사업전환, 구조조정 자금 등 보증대상 기업과 자금에는 제한이 없음

○ 거래대상 금융기관에 제한은 없으나 주요 상업은행은 대기업 자금공급이 중심이므로 통상 **중소기업을 주로 상대하는 지역은행, 즉 저축은행, 협동은행 등과의 거래가 발달**되어 있음

2) 보증심사 및 승인절차

□ 대출은행은 신청기업을 사전심사(preliminary screening)한 후 보증은행의 보증심사에 관련서류 일체를 송부

– 보증은행은 서류심사후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실사를 실시하나 인력의 제한으로 현장실사가 필수는 아님

○ 바덴주 보증은행의 경우 전체 인원 120명중 30명이 신용분석사(credit analyst)로 연간 약 2,000건의 보증신청을 분석해야함(1인당 연간 약66건, 월 5.6건)

○ 30명의 **신용분석사는 지역별로 7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담당지역의 금융기관 · 중소기업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신용분석사는 심사에 필요한 정보 일체를 수집한후 표준적인 절차에 따라 보증신청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

– 수집된 정보의 정리 · 요약, 내부등급 산출, 신청기업에 대한 추천서의 내용 등을 포함

표 4 | 신용분석 보고서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대출조건 (covenants)	■ 보증승인시 기업이 준수해야할 재무비율 등 보증기간동안 기업의 신용도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부과하는 대출조건을 명시
제3자의 신용기록	■ 주거래은행, 상공회의소, 국세청 등의 의견과 관련기록
담 보	■ 신청기업의 담보에 대한 내용 (대출위험의 경감을 위한 보완을 심사)
사업계획 분석	■ 모든 신청기업이 상세한 사업계획(business plan)을 제출*

* 사업계획을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영세기업은 외부 컨설턴트를 활용하여 작성

□ 신용분석사는 정보를 수집하고 대출기업의 신용상태를 조사하지만 **최종 보증승인은 보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보증심사위원회는 표준절차와 약식절차가 있음

표 5 | 표준심사와 약식심사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표준심사위원회 (Standard Credit Committee)	■ 주주, 경제성, 재무성, 보증은행의 대표로 구성 (보증은행의 위원은 거부권 행사 가능) ■ 1개월에 한번씩 위원회 개최 ■ 신용분석보고서(credit report) 준비기간까지 감안 하면 통상 보증승인에 3주~2개월 소요
약식심사위원회 (Simplified Credit Committee)	■ 재무성, 경제성, 보증은행의 대표, 신용분석사로 구성 ■ 1주일에 한번 위원회 개최 ■ 15만유로 이하의 보증신청건을 심사 ■ 보증승인에 필요한 기간은 2주일 이내

□ 보증이 심사위원회에서 승인되면 보증수수료, 보증비율 등의 보증조건과 함께 모든 관련서류를 대출은행에 송부

표 6 | 보증승인 조건의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보증료 등	■ 0.8%~1.5% ■ 등록료 1%
보증비율	■ 50%~80% (보증한도 1백만유로) ■ 평균 보증비율 65%
보증기간	■ 최장 25년 이내
담보 등	■ 통상 담보를 공유 – 부실발생시 담보의 처분후 잔액에 대해서 보증비율에 따라 위험을 분담
대출조건	■ 대출취급시 기업이 준수해야할 재무비율 등(Covenants)

□ 최근 바젤II의 도입과 함께 보증은행연합회, 보증은행, 전문 컨설팅회사가 협력하여 등급평가시스템을 도입

– 등급평가시스템은 비재무모형, 재무모형, 외부정보의 분석 3개 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듈별 가중치는 업력과 평가목적에 따라 다름

○ 최종 신용평가는 각 모듈별 가중치에 의해 0~100의 점수로 환산되어 점수에 따라 부실율을 반영하여 1~13의 등급으로 구분

○ 보증은행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5~6등급 사이에 분포되어 있음
(등급이 낮을수록 충당금 적립비율이 올라감)

○ 15만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의 등급은 위험관리부에서 주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재평가(최소 1년주기)

표 7 | 신용평가시스템의 구성

구 분	내 용
비재무평가 (qualitative analysis)	■ 경영진의 자질, 전문성 ■ 조직(organizations) ■ 회계, 자금관리, 내부통제, 위험관리 ■ 거래처와의 관계(구매처, 판매처) ■ 투자 등 사업계획
재무평가 (quantitative analysis)	■ 각종 재무비율 분석
산업분석 (external information)	■ 산업전망 (예 : 드레스드너 은행의 산업평가, 협동은행연합회의 산업지수, 쥬 경제연구소의 창업지수, 중소기업연구소의 사업환경지수 등 활용)

표 8 | 신용평가시스템의 기업별 가중치

구 분	최초평가시			재평가시	
	창업기업	1~3년 업력	그 외	1~3년 업력	그 외
비재무평가	60%	30%	35%	35%	40%
재무평가	–	45%	50%	45%	50%
산업분석	40%	25%	15%	20%	10%
합 계	100%	100%	100%	100%	100%

4. 정책적 시사점

1) 시장원리와 공공적 목적의 조화

□ 독일 보증제도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조화를 이루는 상호보증제도**로 유럽내에서 가장 발달된 보증제도로 평가

– 독일의 보증기관은 당초 민간부문의 자조적 기관인 **보증협회** ➡ 주정부 단위 경제단체들의 이익단체 성격의 **신용보증조합** ➡ 독일 은행법의 규제를 받는 **보증은행**으로 조직의 체계가 발전되어 왔음

○ 보증기관의 조직체계가 현행과 같이 발전되어 온데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재보증과 저리자금 대출에 의한 **공적지원이 결정적 역할을 하였음**

□ 독일 재보증 시스템의 책임분담 비율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48:52의 비율로 **공공부문의 책임분담이 민간부문보다 다소 높음**

–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독일 상호보증제도에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민간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舊동독지역에 대한 재보증 비율 확대, 지역별 보증은행 외에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경제 보증은행(Guarantee Banks for Social Economy)을 운영하는 등 **정책적인 부문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 국내 보증제도의 경우 〈기업:금융기관:정부〉의 재정부담 비율은 '04년 〈2:3:5〉로 정부가 절반을 분담하였으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재정운용계획상 출연계획에 따른 재정분담 비율은 〈3:6:1〉로 낮아짐

– 국가 주도의 강력한 공공보증제도로 분류되는 국내 보증제도의 경우에도 **최근 정부의 재정 분담비율은 16% 수준으로 독일에 비해 현저히 낮은 편임**

○ 중기재정계획상 **정부의 부담은 2011년 3%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단위: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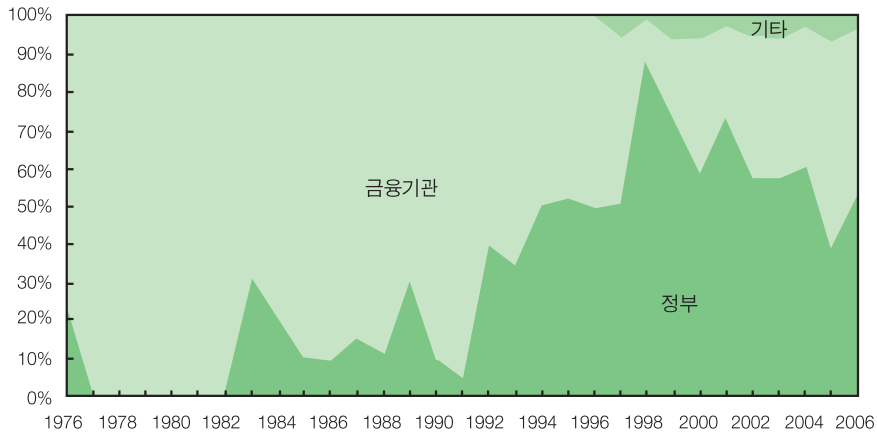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정부출연금	1,300	1,000	1,000	500	250
(점유비)	16%	13%	12%	6%	3%
금융기관출연금	6,783	6,953	7,126	7,305	7,487
(점유비)	84%	87%	88%	94%	97%
합 계	8,083	7,953	8,626	8,805	7,487

주) 정부출연금은 중기재정계획 반영, 금융기관 출연금은 전년도 출연금의 2.5% 증액 가정

– 설립이후 국내 보증기관의 출연금 구성 비율의 추이를 보면 **보증제도 초기에는 금융기관이 대부분 재원을 부담**하다가 ’80년대 석유파동 등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부담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 특히, 1990년대 이후 및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부의 출연금 부담비율이 급증하다가 2000년대에 들어 금융기관의 비중이 다시 상승하는 추세임

그림 5 출연금 구성 추이



자료 : 코딧, 기보, 지역신보 내부자료 취합

□ 출연금 구성추이를 보면 경제위기시 정부의 역할이 확대된 점을 제외하고 대체로 고유의 금융기관 출연제도로 보증재원을 확충

– **금융기관 출연제도는 민간의 재원을 토대로 신용보증제도를 조기에 정착하게한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음

금융기관 출연제도의 성격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 시 부실위험에 대한 보험료적 성격
-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 시 은행이 대위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재원
- 코딧의 경우 은행이 대위변제로 받아가는 금액이 출연금의 약 3.3배

금융기관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액 현황 (설립 시부터 '06년 말까지) [단위 : 억원]

금융기관출연금(A)	대위변제금 총액(B)	차 액(B-A)	배 수(B/A)
57,832	190,727	132,895	3.3배

□ 자금의 재분배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 육성에 지출되는 사회, 경제적 비용
- 정보의 비대칭성, 담보 및 신용도 부족, 수익 대비 거래비용의 과다 등 중소기업 대출기피 요인을 신용보증으로 보완하여 자금을 재분배하고 국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적비용

□ 금융기관이 보증부대출로부터 받는 이익에 대한 재투자비용
- 은행은 신용보증을 통해 손실을 줄이고, BIS 자기자본비율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적정수준의 이익(예대마진)을 얻을 수 있음
- 이러한 이익을 지속적으로 얻기 위해 신용보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재투자비용

□ 보증제도의 직접적 수혜자인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대납하는 성격
- 은행은 출연율을 대출이자에 가산하여 기업에 전가하는 것이 일반적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2007.12)

2) 보증제도 운영의 측면

□ 보증제도의 성립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의 상호보증제도와 한국의 공공보증제도는 **각자 다른 출발점에서 태생하여 시장원리와 공공적 역할의 조화라는 방향을 지향**하면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

– 독일의 경우 정부의 간접지원 방식에 의한 **공공부문의 참여**, 한국의 경우 금융기관 출연제도에 의한 **민간의 참여**를 통해 각각 **재원의 안정적인 확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증제도가 조기에 정착**

◎ 영국의 경우 제도 도입 초기부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원리를 도모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분보증비율 인하(80%⇒70%), 보증료 인상(3%⇒5%) 등을 추진

☞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누적 부실율이 최고 60%를 초과하는 등 대위변제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 보증제도가 실패

자료 : 중소기업금융공고, 제외국의 경험으로 보는 보증제도 운영상의 과제 (2005.6)

□ 경제규모를 기준으로 보증의 운용규모를 보면 독일은 GDP 대비 보증잔액이 0.26%에 불과하고, 저축은행 등 **지역 금융기관 위주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

– 2004년 기준 신용보증부 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저축은행 46%, 협동은행 33%**, 민간 시중은행 14%, 투자회사 7%로 저축은행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대출이 취급되고 있음

– 자금용도별로는 창업자금이 33%, 기업인수 자금이 18%, 기존 회사의 투자 및 운전자금이 49%임

독일 저축은행(Savings Bank, Sparkasse)의 특성

○ 독일의 금융시스템은 연방제에 의한 주의 독립성에 기인하여 **공공적 성격의 지역금융기관을 기반으로 한 관계금융이 발전**하였으며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예**임

○ 1818년 주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최초의 공공저축은행을 설립하였으며, 학교 및 기업내에 지점 설치, 방문접수 등 **독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에서 주민들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

○ 저축은행의 정관에 의하면 지역의 자금수요를 먼저 충족시켜야하므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장기 · 안정적인 자금을 공급하는 주요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관계금융이 발전**

○ 독일은 주별로 독자적인 중소기업정책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영 저축은행 등 **지역의 공공 금융기관 지점망을 활용하고 연방정부는 간접대출(on-lending)로 금융기관을 지원**

은행시스템의 대출행태별 구분[10)]

구 분	관계지향적대출 (relationship banking)	거래지향적 대출 (transaction banking)
특 성	자금수요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	비교적 단기 또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
발달지역	독일 등 대륙식(은행중심 금융시스템)	영미식(자본시장 중심 금융시스템)
장 점	은행이 고객의 지급결제기능을 담당하여 차입자에 대한 정보를 일상적으로 수집, 축적할 수 있어 심사, 감시 기능면에서 절대적 우위를 지님	특수성이 낮은 정보는 거래당사자 이외 경제주체에게도 쉽게 전달가능하며 해당 금융자산은 타인에게 양도하기 용이(위험회피가 용이) 예)유가증권, 주택담보대출 등
단 점	심사비용 등 정보수집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유착관계로 변질될 위험성	기업의 입장에서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부도로 연결될 위험성

10) 한국의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측면에서는 은행중심이었으나, 국가의 은행에 대한 통제로 인해 은행이 기업에 대한 감시 및 통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중심시스템도 아니었고 은행중심시스템도 아니었던 것으로 평가되며 외환위기 이후 단기 상업금융 · 수익성 위주로 경영됨에 따라 단기대출 비중이 높아 국내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취약

□ 보증절차의 경우 독일은 **보증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고 대위변제 절차 등 제도 운영이 한국보다 비효율적**임

– 독일의 경우 약식심사의 경우 2주일, 표준심사의 경우 3주~2개월 가량 소요되는 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협회의 추천절차 등 제출서류와 기업의 준비절차가 까다로움

– 또한 보증의 주요고객인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① 담보처분후에 대출금 전액상환이 불가능한 경우, ② 금융기관의 대출 회수노력에도 불구하고 1년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는 경우에 대위변제를 신청할 수 있는 등 보증의 상품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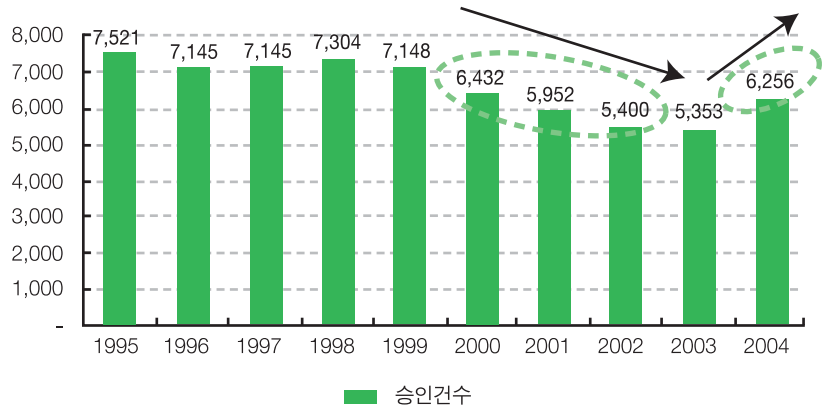
○ 한편, 독일 보증제도의 대위변제율은 3~6%대로 알려져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총 대위변제금액은 252백만유로(한화 3,500억원)로 **보증잔액(5,038백만유로) 대비 대위변제율은 5%**임

□ 과거 10년간 추이를 보면, 1990년대에는 연간 승인건수가 7,000건을 초과하였으나, 2000년 이후 승인건수가 감소하였다가, 2004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임

– 2000년 이후 승인건수와 신규공급 감소의 주요원인은 독일경제의 침체와 중소기업의 창업 부진임

⇒ 경기침체기에 보증공급이 감소하고, 경기상승기에 보증공급이 증대되는 **경기순응적인 보증정책으로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

그림6 독일보증은행의 보증승인 건수(1995~2004년)



자료 : Axel G. Schmidt 외1, The Macroeconomic Benefits of German Guarantee Banks(2006.2)

표9 독일 보증은행의 실적 현황 (단위:천유로)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기본재산	250,985	260,000	280,000	290,000	300,000	300,000
보증잔액	4,952,169	5,102,565	5,112,670	5,040,719	5,038,136	5,135,702
신규공급	1,054,169	1,016,093	923,068	906,095	1,037,500	1,114,600

자료 : 독일 보증은행협회(VD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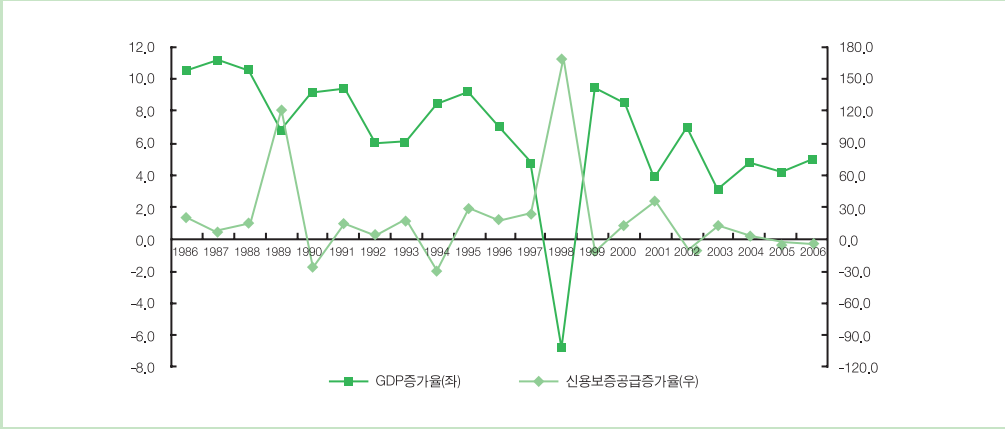
□ 한국의 경우 경기침체기에 보증공급을 확대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

– 민간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인 대출행태로 인한 경기변동의 진폭을 확대시키는 부작용을 완화하는데 기여

신용보증의 거시적 성과 실증분석 결과

○ '97.12월에서 '07.3월 사이의 GDP, 보증잔액, 중소기업대출, 설비투자지수, 고용율 등의 시계열자료를 기초로 VAR모형과 충격반응함수에 의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용보증은 경기침체기에 공급이 확대되었고, **"중소기업 대출의 증가 → 신용보증의 증가 → 투자확대 → 고용증대 → 경기상승"의 선순환 고리를 창출하여 국민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GDP증가율 및 신용보증 증가율 추이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2007.12)

참고문헌

○ 오철우, 곽성철 (2001.2), 유럽 선진국의 신용보증제도와 시사점, 보증월보

○ 정남기 (2005), 유럽금융기관의 대출행태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행태 및 시사점, 중소기업연구원

○ 중소기업연구원 (2007.12), 신용보증의 성과분석과 발전방안

○ 신용보증기금 홍보실 (2007.6), EUROFIDI와 업무협약 체결 및 2007 AECM 연차총회 참가 결과보고

○ Paola De Vincentiis 외5 (2007), The Guarantee Systems and the SMEs Access to Credit

○ Axel G. Schmidt 외1 (2006.2), The Macroeconomic Benefits of German Guarantee Banks